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스케치

도심 속 500년 전 한양 집터를 거닐다

고층 건물들이 늘어난 서울 종로구에는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가 담겨 있다. 1호선 종각역 3-1번 출구를 빠져나오면, 도심 속 과거의 흔적을 품은 장소가 있다. 출구 건너에 있는 거대한 건물, 센트로폴리스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한복판에 우뚝 솟은 센트로폴리스는 법무법인, 금융사 등 다양한 기업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조선시대 골목길과 건물터를 보존한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을 보존한 이 전시관은 현대 사회에 500년 전 숨결을 불어넣는다.

역사와의 상생을 시도하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일명 ‘공평동굴’을 적용한 최초 사례다. ‘공평동굴’은 도심 정비사업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최대한 원위치 전면 보존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공평 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유적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유적을 원래 위치에 전면 보존하고자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건설 공사 시행자 측에 인센티브를 제시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건물 지하공간을 유적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대신, 건물을 기존 계획인 22층보다 4층 더 높은 26층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유적 전시관이 자리한 지하 1층은 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16세기부터 18세기의 조선시대 한성 도심부의 시장, 관아, 주거공간과 골목길 터 등이 있다. 발굴 지역의 층위는 시기에 따라 6개 층으로 분류된다.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의 토층에서는 가장 온전한 모습의 건물터가 발굴됐다. 유적도 이 시기를 중심으로 복원됐다.

재현된 500년 전 삶의 터전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탁 트인 전시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벽면에 걸린 커다란 목판 지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속에는 사대문 안 한양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의금부 등 주요 관아 건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자세히 표기된 시전의 명칭도 볼 수 있다. 발밑으로 시선을 내리면 투명한 유리 바닥을 통해 첫 번째 집터가 보인다. 면적 200평(약 661㎡)이 넘는 ‘전동 큰집’이다. 담장을 이루던 돌을 따라 걸으면 그 크기를 체감할 수 있다. 행랑채, 사랑채, 부엌 터 등의 공간도 그대로 남아있다. 집터 옆에는 전동 큰 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0분의 1 크기 모형도 있다. 다음에 전시된 ‘골목길 ㄱ자 집’은 대문 앞에 골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붙여진 이름이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집터에서 출토된 화로와 질 좋은 초석 때문에 부유한 상인의 집으로 추정된다. VR 체험을 통해 골목길 ㄱ자 집의 모습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VR기기를 착용하면 가상의 집주인이 등장해 길을 안내한다. 대문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와 대청마루 양옆의 방까지 둘러본 후 다시 돌아 나오는 구조다.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면 기둥과 마당에 깎아놓은 돌, 방 내부에 놓인 화로가 보인다. ‘이문안길 작은집’은 1대1 복원을 통해 집의 뼈대를 만들었다. 초석 위 유리 바닥에 기둥을 얹고 기둥 위에 서까래를 얹어 실제 크기의 집을 재현했다. 대청마루 터로 들어서면 왼쪽에는 온돌방 터가, 오른쪽에는 온돌이 없는 마루방 터가 있다. 마루방에는 골목길 ㄱ자 집의 VR 체험에서 접한 화로의 실제 모습이 전시됐다. 계단을 통해 유리 바닥 아래로 내려가 담장 터 사이로 난 전동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 양옆에 놓인 돌을 유심히 살펴보면 돌

위에 적힌 숫자가 눈에 띈다. 돌을 수장고로 옮길 때, 발굴된 위치의 좌표를 표기했다. 실제 발굴된 돌에 화학약품 처리해 골목길을 복원한 것이다. 약간의 이동은 불가피했지만, 돌에 표시된 좌표를 통해 유적들은 최대한 원위치에 보존됐다. **흙 속 시전의 흔적을 꺼내다** 이문안길 작은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집터와 함께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도 보인다. 조선시대에 공평동은 시전의 배후지였기 때문에 상인이 거래하던 물건과 화폐가 많이 발굴됐다. 유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왼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리면 엘리베이터 앞에 시전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사람의 모습을 한 하얀색 조형물들이 앉거나 서 있는데, 소설 속 이야기를 들려주던 ‘전기수’, 손전등 역할을 하는 조족등을 들고 순찰을 돌던 ‘순라꾼’ 등이 그 주인공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들과 도망치는 사람을 뒤쫓으며 소리치는 순라꾼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진다. 전기수가 서 있는 모퉁이를 돌면 17세기 후반 유통되기 시작한 화폐인 상평통보를 볼 수 있다. 일본과 베트남의 화폐도 함께 있어 외국 화폐도 거래됐음을 알 수 있다. 화폐들 뒤로는 흙과 돌 사이에서 선명한 푸른색을 띠는 청화백자가 보인다. 백자에 푸른색 안료를 칠해 만든 청화백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다.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다양한 용도의 그릇도 볼 수 있다. 그릇 바닥에 여성의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자기가 대거 발굴됐다. 그릇을 빌려주는 가게인 ‘세기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릇이 많이 필요한 잔치 등을 이유로 세기전에서 그릇을 빌린 사람이 누군지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이 외에 부유한 상인들이 쓰던 청동제기, 건물을 지을 때 안전



1 '골목길 ㄱ자 집'은 출토된 화로를 통해 부유한 상인의 집으로 추정된다.
2 '전동 큰집'은 원래 크기의 10분의 1 축소 모형을 통해 한눈에 접할 수 있다.
3 집터의 돌과 기와에는 발굴 당시의 위치가 표시된 숫자가 적혀 있다.



과 변역을 기원하기 위해 땅에 묻은 진단구도 살펴볼 수 있다.

전시관의 가장 안쪽에서는 특이한 구조물을 볼 수 있다. 철기동 세 개가 전시관 바닥에 박혀있다. 공평도시유적의 흥터 자국이다. 센트로폴리스가 세워지기 전인 1981년, 공평동 유적 위로 공평빌딩이 건립됐다. 2014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며 빌딩을 철거하고 지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빔이 유적

지를 파괴한 채 세워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관계자들은 철기동 구조물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공평빌딩의 H빔은 개발의 우선으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 또한 공평동 유적이 지닌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유적지 훼손부터 공평동굴까지 유적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글 | 이가림 기자 forest@
사진 | 양수현 기자 positive@

박대재(문과대 한국사학과) 교수 인터뷰

“보존 vs 개발, 균형을 위해선 선택과 집중 필요해”

매장문화재는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소통 중요
문화재 관심은 주변부터 시작해야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가치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재가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자산임은 변치 않는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라는 공식 용어를 60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교체하려 한다. 재화적 의미가 강하게 담긴 ‘문화재’라는 명칭 대신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포함한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문화재를 단순히 과거 연구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고대사학회 총무이사인 박대재(문과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매장문화재의 가치
“경주의 대릉원, 월성, 서울의 경복궁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문화재는 땅을 파지 않아도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옛 문헌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고대사 연구는 매장문화재에 많이 의존합니다. 매장문화재는 아파트나 도로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화재가 확인되

는 것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풍납토성의 발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한강이 범람했습니다. 송파구 일대의 한강둑이 무너지면서 한양재를 다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청동제 ‘조두’가 다량 출토됐습니다. 이로써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강 둑인 줄 알았던 것이 알고 보니 풍납토성의 서쪽 성벽이었죠. 백제 역사를 뒤늦게

들만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적 지정 논의 과정
“(사적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직접 지형을 보고 최대한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로 사적을 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사서를 작성한 뒤, 안전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요. 문화재위원회에서 안전이 통과되면 결과를 한 달간 공시합니다. 여론을 듣기 위함이지요. 사유재산이 사적에 포함돼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곳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등의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안들이 해결되면 사적 지정이 공표됩니다.”

-지자체별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논의 중이다
“지금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고고학이나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기 힘듭니다. 시공업체 측이나 공사를 감독하는 지자체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공사가 끝나길 바랄 수밖에

에 없어요. 문화재에 대한 학술적인 모니터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죠. 따라서 전문 학예사가 각 지자체에 배치돼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 학예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임의로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자체별 문화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다만 공무원 채용하는 일은 매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에 모든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요 사적이나 국보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문화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을 도별로 설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문화재청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지자체에 문화재 관리를 의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이죠. 따라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행정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모든 매장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집 앞의 땅을 파도 백자 조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생활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일반적이거나 자주 볼 수 있는 유물들이죠. 이런 유물들까지 원위치에 보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토지가 대부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발굴된 모든 문화재의 보존을 강제하기도 어려워요.

가치를 잘 판단해 중요한 문화재일 경우 보존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우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존 방식 또한 다양할 수 있겠죠. 교육적인 목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한 문화재는 테마파크 조성이나 야외공원 형식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당장 노출 보존을 하기 힘든 경우, 훼손을 최대한 피하려고 흙으로 다시 덮어서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판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문화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문화재에 관한 관심을 높이려면
“문화재를 보존하고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선 사람들이 스스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아야 해요.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부터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문화재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본교 학생들만 해도 제기둥이나 애기능의 명칭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잘 모릅니다. 학교 건물 일부가 사적으로 지정된 사실과 개운사 앞의 작은 절 보타사가 서울시 문화재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재를 알려야 합니다. 문화재에 대해 아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이나 정부, 지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재에 대한 애정도를 높일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글 | 이가림 기자 forest@
사진 | 양수현 기자 positive@

